

평양 무인기는 김용현 지시? 군 내부에서 전격 '폭로'

1:12

점점 드러나는 내란의 전모

국지전까지 기획한 무모한 정권 끝내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비상계엄 발표 1주일 전, 윤석열 정부의 김용현 (전)국방장관은 북의 오물 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고, 지난 10월 평양 상공의 무인기 침투 역시 김 전 장관의 지시 아래 방첩 사령부가 기획했다는 제보가 알려졌다. 10월 하순 연평도 해병대 사격훈련으로 서해 NLL 인근에서의 충돌을 유도하고, 우크라이나에 국방부와 국정원의 인력을 파견한 것 또한 전시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SBS
NEWS

속보 풀영상

한덕수·한동훈 대국민 담화 "윤 대통령 조기 퇴진할 것"

10:24

"니네가 뭔데?"

내란동조범들의 권력 장악을 막아내자

"질서있는 퇴진"이란 뻔뻔하고 허울좋은 명분이 시민들의 화를 더욱 돋우고 있다. 내란공범 한동훈, 한덕수의 대통령 권한 행사는 헌법상 근거도 없고 법률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소추 의결 뿐이다. '사실상 직무배제' 표현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을 임명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사표를 수리하는 등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학자 573명이 "2선 후퇴는 눈속임"이라고 시국선언을 낸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이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정치적 위기에 이를 비집고 들어와 질서있게 퇴진 유도한다는 건 (권력 장악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의 연성 쿠데타, 내란 예비음모와도 같다"라고도 지적했다.

너희는 그 무엇도 아닌 내란동조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12월 3일 계엄이 발동되었고 국회의원들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담을 넘어 국회로 향했다. 시민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군대의 투입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막아섰다. 윤석열의 계엄이 실패로 끝난 후 12월 7일, 윤석열 탄핵안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계엄에 맞설 용기도 민주주의를 지킬 양심도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최소한 염치도 없다. 그런데, 내란동조범들이 어디서 감히 권력을 운운하고 국정 수습을 운운한단 말인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를 판에 권력을 나누겠다고 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에 더욱 분노한다.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멈추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행정부 수반은 윤석열이다. 신속하게 탄핵하고 윤석열을 체포해서 그들이 마련했다는 동부구치소 독방에 수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적극 동참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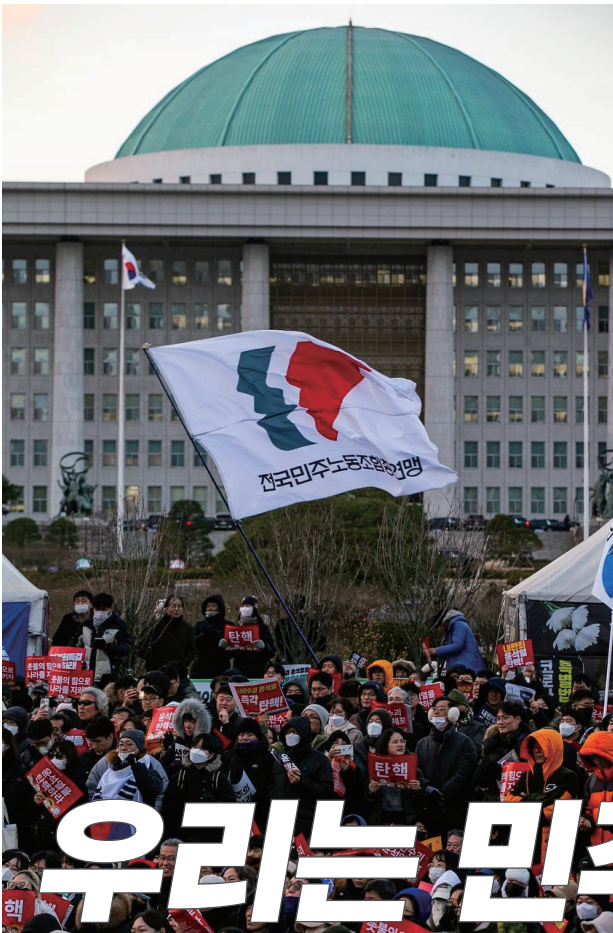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의 뜻을 명백히 보여주겠다.

흑독한 겨울 다시 한 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 여러분 민주노총이 앞장서 길을 열고 싸워나가겠다.





우리는 민주노총이다!

윤석열정권 퇴진! 사회대개혁 쟁취!

민주노총은 12.3 내란사태와 탄핵정국에서 즉각적인 총파업을 결정하고 전국적인 집결 투쟁, 국민의힘 타격 투쟁으로 민중의 지지 기반을 확장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윤석열정권 퇴진 투쟁에 앞장서자!

윤석열 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민주노총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직접 “조폭”,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들을 퍼부어 왔다.

극악무도한 이 정권의 노동기본권 유린은 언동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정부가 약속한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벌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노동으로 몰아넣었다. 건설노조가 고용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행동을 한 것이 ‘공갈·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조합원 2천여 명을 수사하고 전국의 수십 개 노조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41명을 구속시켰다.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정권에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실질적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손배 폭탄’을 맞는 일을 제한하기 위해 국회가 두 번이나 의결한

노조법 개정안을 모두 거부했다.

아무런 실제적 근거도 없이 막연히 산업현장에 불안을 가져올 ‘위험적 요소’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누가 진짜 국가와 경제·사회에 위협을 몰고 왔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다.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12.10) 맞이 노동법률단체 성명 발제

윤석열정권의 몰락은
노동,민생,민주,인권,평화 파괴의
인과응보이다!
민주노총이 앞장서
윤석열정권 몰아내고
노동중심의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민주노총 투쟁지침

- 탄핵 시민대회 적극 참여
매일 저녁 6시 촛불 집회
- 국민의 힘 규탄 투쟁
국민의 힘 의원사무실 규탄 투쟁 매일
- 대규모 퇴진집회 개최 및
지역동시다발 대회
12.14(토) 15시
- 민주노총 전체 사업장 현수막 게시,
출퇴근 및 중식 선전전 등

